



글 _ 김 선 구(No. 31764)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수석연구원

국내 전기안전관리 대행제도 운영실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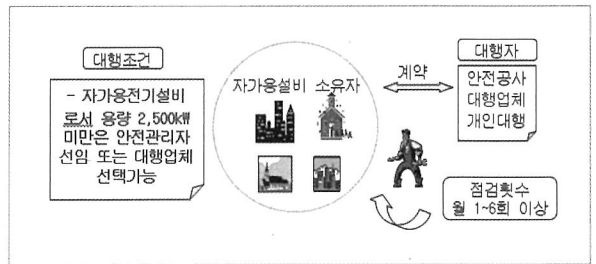
1. 서론

세계 각 선진국의 경우 전기안전 등 여러가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구축해야 할 인프라 중의 하나가 전기안전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기안전 확보의 근간이 되는 전기안전관리대행제도의 제도개선 방안 등에 활용하고자 현장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과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지자체 인허가 담당공무원 설문조사 그리고 국내 및 일본의 관리감독 체계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2. 본론

2.1. 전기안전관리대행제도 개요

우리나라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임대상 설비로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가 해당되며, 전기안전관리자는 크게 상주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안전관리대행자로 나눌 수 있다¹⁾. 그리고 그림 1에서 보듯이 2,500kW미만의 자가용전기설비는 상주고용하는 대신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행업체를 선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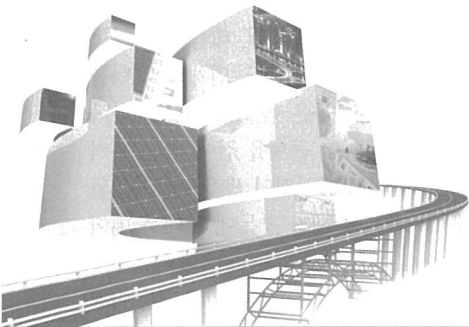


【그림 1】 전기안전관리대행제도

국내 자가용전기설비는 표 1과 같이 최근 5년간 매년 꾸준히 약 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말 자가용전기설비는 총 245,772호였다.

【표 1】 최근 5년간 자가용전기설비 현황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호수	201,504	212,290	221,457	232,866	245,772
전년대비 증가호수	-	10,786	9,167	11,409	12,906
증가율(%)	-	5.3%	4.3%	5.2%	5.5%



자가용전기설비중 약 85.2%를 안전관리대행업체가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중 전기안전공사 6.4%, 대행업체 78.8%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대행업체 및 소속 전기안전관리자는 2011년말 기준, 총 790개 업체에 전기안전관리자는 총 9,124명이다.

연도는 다르지만 한국과 일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현황과 3년간 대행업체 증가현황은 표 2 및 표 3과 같다.

【표 2】 한국 및 일본의 자가용전기설비 현황

구 분	한국('11년말)	일본('05년말)
자가용전기설비 총건수	245,772	796,692
안전관리대행 건수	209,494	715,654
대행 점유율(%)	85.2%	89.9%

【표 3】 한국 및 일본의 3년간 대행업체 현황

연도별	한국	일본(연도)
2011	790社	187社('06)
2010	759社	171社('05)
2009	719社	118社('04)

2.2. 전기안전관리대행 실태조사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

경제성장 발전에 따른 전력사용량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재해 예방 활동의 중심에 있는 전기안전관리자들의 활동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대행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대행업체와 유관 기관 등에 대한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으로서는 대행업체 등록 간소화로 인해 업체 난립 및 과도한 저가입찰 수주경쟁 등으로 부실점점 등 안전관리상 일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관리감독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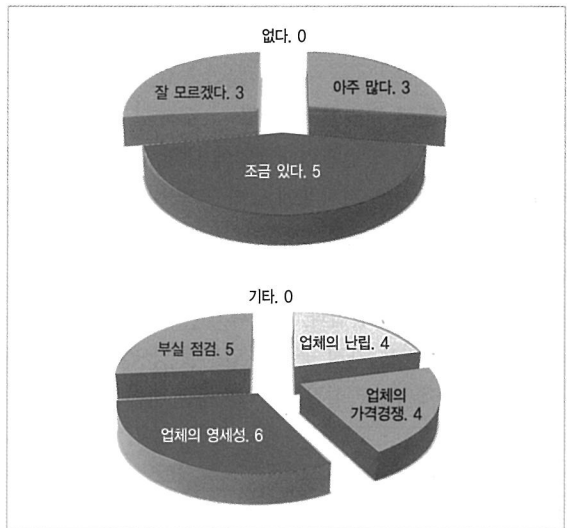
따라서 제도 개선방안 주요 의견으로는 안전관리대행등록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강화, 대행가중치 회사단위 통합관리, 저압수용가 대행가중치 조정, 안전관리보조원 의무고용제 폐지, 등록시 필요 법정보유 장비에 대한 정비 그리고 영업

배상보험 등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안전관리 대행수용가의 전기설비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전기안전관리대행 점검대가의 산출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자간에 분쟁을 최소화하여 대행업무의 부실예방과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대행업체의 업무수행에 대한 외부의 관리감독 기능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다수 수렴되었다.

2.3. 인허가 담당 지자체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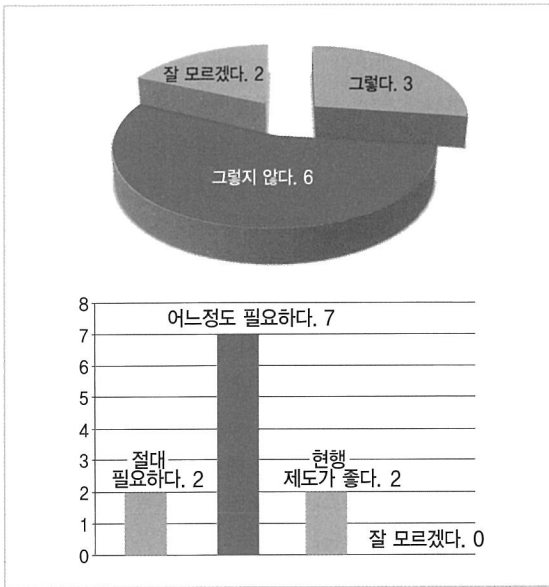
전기안전관리대행 인허가를 담당하는 전국 16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대행업체 자격 및 등록요건 개선사항, 대행업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회신된 11개 지자체 공무원 답변을 기준으로 분석한 중요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안전관리대행제도의 문제점 여부에 대해서는 8명이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세부 문제점으로 업체의 영세성, 부실점점 및 업체의 가격경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2】 대행제도 문제점 여부 및 주요내용

다음은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해당 지자체에 있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업무과중 및 인력부족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6명, 그리고 관리감독을 위한 제3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9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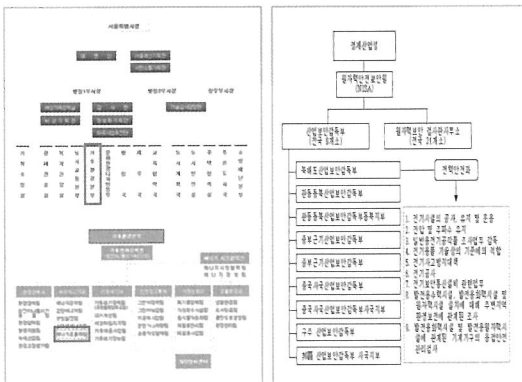


【그림 3】 관리감독 성실 시행 여부 및 감독기관 필요성

또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11명중 8명이었고, 그 지도감독의 주기는 1년 1회 실시가 3명, 2년 1회 실시가 5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4. 국내 및 일본 관리감독 체계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관리대행업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이 각 시도 지자체에 있다. 그러나 그림 4(a)에서 보듯이 서울특별시의 경우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녹색자원과 에너지안전과, 경제산업본부 신성장산업과, 지식경제과 스마트그리드과 등 각기 다른 부서명을 가진 곳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등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실질적 관리감독은 미흡한 실정이다.



(a) 국내 예 (b) 일본
【그림 4】 대행사업자 인허가 및 관리감독 체계

그러나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 산하기관인 전국의 9개 산업보안감독부에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북해도산업보안감독부의 경우는 정기적인 현장검사 등을 수행하여 2008년 9월에 전기보안관리업무 미실시가 적발되어 이와 관련된 재발 방지를 지시한 적이 있고, 2009년 4월에는 전기주임기술자 면허증의 반납을 명한 사례 등이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3. 결론

현대산업사회에서 고도의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대행업체간 가격경쟁 등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산업합성화를 도모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업체의 영세성을 심화시켜 수용가 전기안전 확보에 지장이 생길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및 관계기관 등의 노력과 함께 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성실한 안전점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개선사항 등은 없는지 다시 한번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김두현 외 4인, 전기안전관리 대행제도의 합리적 운영체제 구축방안 연구, 지식경제부, 2010.2
- [2]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재해의 효과적감소를 위한 전기안전 관련 시스템 리엔지니어링 방안연구, 산업자원부, 2006.5

※ 본 내용은 협회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